

낙농가의견 적극 반영되어야



이 광 동
본회 이사

낙농 농민은 정부당국에 강한 불만과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부분은 정부당국에 대한 항변은 이유가 있는가, 소위 정부 당국이 조치하는 일들이 합리적 방법으로 공감을 얻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고민해야 하고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날 원유잉여로 인한 생산조절 제도는 전체 낙농가를 고통에 빠트렸고 폐업 등은 전체 축산업을 사양화 길로 치닫게 하고 있다. 수 십년 내지 수 년간 부채를 떠 안으며 투자한 낙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국민이 건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다.

정부 당국이 축산인구를 줄여야 하겠다는 속마음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농업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금번 설치된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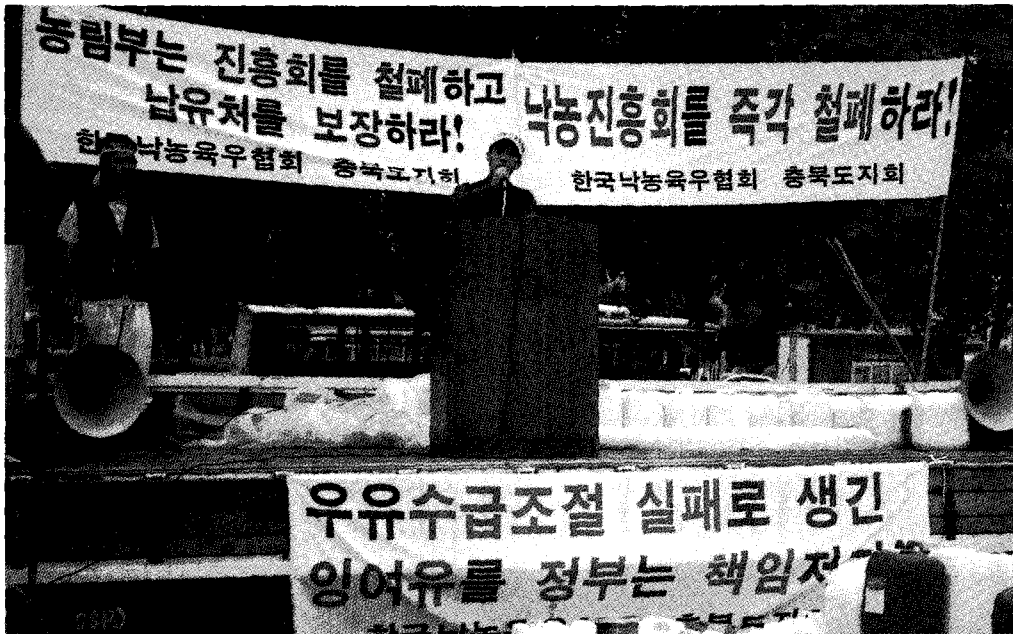
1993년 UR 협상시 낙농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 유럽 등 낙농선진국들이 각기 자국의 낙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에 치중할 때 우리 정부는 쌀 보호전략에 치중한 나머지 모든 농축산물에 소홀했고 불리한 협상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모든 유제품이 저관세로 수입자유화되면서 현재의 국내 낙농상황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협상단은 이웃 일본이 관세 외에 수입분담금제를 주장하고 관철함을 모를리 없었으며 협상단이 아둔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자국 농산물을 포기한 것은 수출지향적 공산품 우위 전략에서 의도된 소외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의도된 협상으로 낙농산업의 불투명과 어려움이 예고되어 뒤늦게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면서 전문 전업화를 유도하고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향상, 사양방법의 개선, 종축개량 등에서 획기적 발전이 있는 반면 농가부채의 증가, 원유 잉여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대안으로 낙농진흥법 개정과 낙농진흥회의 탄생이다.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회의 탄생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더라도 낙농진흥회의 운영이 너무 이상적인데 치중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현장이 고려되지 않고 낙농가의 자율적 결정과 의사반영 측면이 배제됨으로써 극히 비현실적이고 사무적 진행이라는 저항이 생겼고 불신과 반목





이 증폭되었다는 낙농가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일 예로 낙농진흥회 구조적인 임원 구성이 그것이다. 갑작스런 원유생산제한 조치로 분노한 농민의 항변은 이런 이유만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며 불신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므로 자연스럽게 낙농산업발전대책 협의회에 초미의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가 하는 일들은 정부당국의 낙농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으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종전의 피해를 되풀이 할 수 없고 계속 당하지 않겠다는 낙농가의 심경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이 낙농발전대책협의회 구성면에서 또다시 실수가 있는 것 같다. 낙농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낙농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현장 접근에

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적구성에서 볼 때 자율성과 농가의 의견 개진은 결국 봉쇄되어 있다. 학술적 이론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위원 15명 중 낙농가 2인이 무엇을 반영하고 개진할 것인가 의문이다.

일 예로 건국대학 낙농학과를 졸업하고 축산 지도직 공무원을 하던 친한 동향 후배가 공무원직을 포기하고 낙농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낙농인들에게 엉터리로 지도했는지 반성" 된다며 "오히려 낙농가에게 지도 받으면서 낙농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새삼 떠오른다.

현재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 쿼터제도, 진흥회 존속 여부, 농가원유수취가격의 적정선 여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디 농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어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공감되는 낙농정책이 수립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부디 농가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어 자율성이 보장된 가운데 공감되는 낙농정책이 수립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